

#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예타 통과

### 다이아몬드 제도 육로 교통 완성 눈앞

### 섬 주민 이동권 향상·관광 활성화 기대

전남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다도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천사의 섬 신안의 '다이아몬드 제도'의 육로 교통 완성이 눈앞에 다가와 섬 주민의 이동권 향상이 물론 관광 활성화의 한 획을 긋게 됐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500억 원 이상 국도·국지도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신안 추포-비금 등 6지구 1조 6,104억 원이 반영돼 전국 대비 28.0%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38지구 5조 7,454억 원의 사업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천사대교·임자대교·추포대

교 개통에 이어 자은-암태-팔금-안좌-장산-신의-하의-도초-비금도까지 신안 9개 섬의 육로 교통 대동맥이 연결된다.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의 자동차 왕래 시대가 활짝 열리는 셈이다.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은 섬 주민의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그러나 이번 예타 평가는 비수도권 평가 중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기존 25~35%에서 30~40%로 상향되면서 인구 비례에 따른 기계적 계량보다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 이슈를 밀도있게 반영, 연도교

건설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비는 3,827억 원이며 총연장 10.41km다. 암태 신석-단곡 국도 개선은 총사업비 582억 원이며 총연장 9.12km 도로다.

추포-비금 연도교가 개통하면 목포에서 비금까지 해상으로 120분 이상 걸렸던 통행시간이 육상 60분 이하로 단축돼 섬 고립 문제가 해결되고,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 주민의 편의 증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국도 2호선 신석-단곡 구간 역시 기존 도로의 선형 불량 구간을 개선함으로써 교통 체증 문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제기됐던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남도가 추진하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중 서부권의 랜드마크인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완성이 더욱 가까워

져, 6,000만 관광객 시대를 지속하기 위한 전남 관광사업개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천사대교 개통 이후 신안 관광객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육로와 연결되는 비금도는 이세돌바독기념관, 명사십리 해변과 대동염전, 내촌 돌담길, 선양산 등 관광지 접근성이 개선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전남의 대표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섬은 연륙·연도교 설치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번 예타 통과로 신안이 세계적 섬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다도해의 가치를 높이고 전남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해서 SOC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 이정미 “양당 사생결단식 적대정치 미래 맡길 수 없어”

### 시의회서 기자회견

정의당 대선 후보인 이정미 전 대표는 6일 “거대 기득권 양당에 사생결단식 정치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똑바로 하겠다. 정의당의 부족함은 따끔히 알려주시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야 할 정의당 집권의 길을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동 참사 이후 명확한 원인 규명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

야 함에도 현실은 참담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내 삶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동 참사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광주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등 광주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봉과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황애란 기자



### 도, 기후행동 캠페인 동참

전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코자 세계 1만여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에 가입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주관한 ‘레이스투제로(Race To Zero)’ 캠페인에도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는 충남 당진시의 자택에 따라 6일 유엔 캠페인의 파트너 기관인 ICLEI(한국사무소 주관)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과 ‘레이스투제로’를 동시에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릴레이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은 9일까지 이어진다. /길용현 기자

## 광주시민권익위, 시민제안 5건 정책권고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27차 전위원회회를 열고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정책들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광주’를 통해 접수된 8개 시민제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중 ▲버스정류장 에어컨·온열의자 설치 필요 ▲광주시 수어교육원 설립 ▲공동주택 선진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역할 ▲동림동 삼익아파트-푸른마을 버스노선 추가 ▲전남·일선방직 공장 부지 개발관련 공론장 필요 등 5건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황애란 기자

**국제비즈니스호텔**  
새롭게 다시 만나는 W-STAY 국제비즈니스호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 문의: 062) 673-070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8 (주월동 1287-2)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이 6일 오후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투기 민간자본의 필수공공재 잠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 “필수공공재, 시민 이익 부합되게 운영돼야”

### 시의회 정책토론회...공공자산 재공용화·공적기관 운용 방향 수립 요구도

맥쿼리 자산운용주의 해양에너지 인수로 촉발되었던 투기자본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더불어민주당·북구 5) 의원은 6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투기 민간자본의 필수공공재 잠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맥쿼리자산운용주의 해양에너지 인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균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부장은 '공공재(천연가스) 민간자본과의 경쟁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발표했다.

김 지부장은 “국내 천연가스 산업체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공공이익에 적합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도매사업의 지위를 직수입자가 실질적으로 영위해 기업 이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가스공사도 단순한 사업자와 다를바 없어, 천연가스 물량 축소는 서비스 질 저하

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대안으로 “발전용 LNG국가 수입의무서비스제를 신설하고, 발전공업 직수입 중단과 개별요금제 적용을 위한 도입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민간직수입자의 우회적 도매사업 규제와 기후위기 시대에 따른 공공재 국가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투기 자본에 대한 공공적 통제가 필요하다’ 발제를 통해 “공공재에 대한 지나친 수익률을 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며 “민간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공공자산의 재공용화와 공공 수익률과 민간 수익률의 적절한 접점을 찾고 연간 수익률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며 밝혔다.

이어 “기후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에너지 전환 등을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는 민간에서 운용되는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재 성격의 재화를 재공용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 시도 민간에 의해 운용되는 공공재의 재공용화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맥쿼리인프라는 지역상생 방안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경제에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천연가스 수입과 연료전지 분야 진출, 기존 도시가스망을 활용한 수소가스 공급 등을 통해 다시 민간에 의한 공공재 침탈이 반복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신규 공공재는 공적기관이 운용한다는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가, 지자체 차원에서 통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요금인상이나 사업주체 변동시 정부나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심사를 거처거나, 투기자본 일정비율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필수공공재는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필수공공재에 대한 투기 민간자본의 잠식에 대해, 법과 제도 마련 및 개선을 위해 적극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